

POLITICS

2025년 7월 4일 금요일

‘한여름밤의 미식 바캉스’

대인예술아시아시장 개장

광주시는 7월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광주 동구 대인예술시장 일대에서 ‘한 여름밤의 미식 바캉스’를 주제로 ‘2025 대인예술아시아’를 연다.

대인예술아시아장은 전통시장과 예술의 상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표적 야간 문화공간으로, 청년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 모두에게 감성적이고 합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콘텐츠와 공간 연출을 대폭 새롭게 구성해 관람객을 맞이한다.

시장 전역에는 전통 먹거리와 푸드트럭이 어우러진 미식 부스가 마련돼 토요일 저녁 밤상을 책임진다.

특히 청년예술가들과 상인회가 협업체 만든 ‘대인 말차 막걸리’, ‘얼그레이 막걸리’ 등 이색 막걸리 시리즈는 대인예술시장의 감성을 담은 대표 콘텐츠로 기대를 모은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도 준비하다.

정충들이 못다한 이야기를 고백하는 1990년대 추억의 인기 프로그램을 오마주한 ‘가슴을 열어라’는 시장 옥상에서 진행되는 참여형 체험 무대로, 세대 간 소통을 유도한다.

오라실 게임을 실물로 구현한 ‘대형 테트리스 체험’, KIA 타이거즈 응원 이벤트 ‘기아야 가 보즈아!’, 어린이 체험형 미션 ‘부엉이 탐험대’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 아시아장에서는 대인예술시장을 상징하는 부엉이 캐릭터가 새롭게 리뉴얼돼 선보인다. 새 캐릭터 ‘부엉’, ‘어영’, ‘고영’은 굿즈로 제작돼 아트슈퍼마켓에서 판매되며, 캐릭터 탄생 스토리를 배경으로 한 ‘어린이 그림 대회’도 현장에서 진행된다. 수상작은 8월 ‘한평갤러리’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시장 곳곳에는 복고 감성과 여름 바캉스 분위기를 살린 포토존과 감성 공간이 조성돼 방문객들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친환경 실천 문화 확산 앞장

광주시는 오는 9월 열리는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와 친환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3일부터 23일까지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대회 공식 사회관계망(SNS) 계정(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gwangju_2025)을 통해 ‘친환경 대회 응원 댓글 달기’로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대회 공식 계정을 구독(또는 팔로우)하고, 이벤트 게시물에 응원 댓글을 작성한 후 네이버 폼에 제출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텀블러와 커피쿠폰을 증정한다.

광주시와 세계양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노 플라스틱(NO! Plastic), 예스(YES) 966’을 핵심 구호로 삼아, 30년생 소나무 966그루를 식재하는 효과에 상응하는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회조직위는 경기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을 최소화하고 종이 홍보물 대신 정보무늬(QR코드) 기반 온라인 홍보물을 적극 활용하는 등 탄소 배출 저감을 적극 추진한다.

선수단에는 일회용 생수병 대신 텀블러와 식수를 제공하고, 일반 관람객들이 직접 탄소발자국 줄이기 등 탄소중립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전은옥 문화체육실장은 “지속할 수 있는 국제대회를 지향하는 이번 대회가 ‘평화의 울림’뿐만 아니라 ‘친환경의 울림’도 전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지역 살리고 세계 품는 글로컬 전남교육 열겠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민선 4기 3주년 기자회견

글로컬 작은학교 등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

전남학생교육수당 확대·직업교육 내실화 등 추진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품는 글로컬 전남교육으로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3일 오전 청사 대회의실에서 ‘주민주선 4기 전남교육 출범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남은 1년 전남교육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교육’의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K-교육은 K-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세계시민교육, 공생의 철학을 담은 생태환경교육, 인공지능(AI) 기반의 맞춤형 교육을 중심으로 한 전남교육의 핵심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전남교육청은 교원 기초정원제 도입, 지역 맞춤형 교원 양성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개편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또 “지역

균형 발전과 고등교육 혁신을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학 육성 및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며 “K-교육이 전남교육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지역 특성에 발맞춘 교육 여건 및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K-문화를 대표하는 판소리, 국악을 비롯해, 전남의 문화·교육 자산을 세계와 잇는 사업도 본격화한다.

전남 식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전남 K-푸드교육센터’ (가칭)가 2028년 국성에 들어서며 생애주기별 성장을 지원할 ‘글로컬 다문화 통합교육센터’, 지역 맞춤형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글로컬 K-교육센터 (가칭)’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남형 글로컬 작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3일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주민주선 4기 교육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은학교 모델을 도입해 학교마다 차별화한 교육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2026년 개교 예정인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는 지역 산업 인력을 키우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글로컬 직업교육 특화 모델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남학생교육수당은 학생들의 학

습습 체계를 강화한다.

올 하반기에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의 연장선으로 ‘2025 글로컬 전남교육 작은박람회’를 열고, 글로컬 교육콘퍼런스·2030수업 축제·전남교육 성과나눔 등을 통해 글로컬 전남교육의 미래를 그려간다.

특히 지난 3년 간 전남교육이 일궈온 성과는 교직원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가족 모두의 성원 덕분이라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김 교육감은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주민주선 4기 전남교육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온다고 했다. 교육으로 지역의 희망이 살아난다면, 세계의 인재들이 전남으로 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도교육감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남교육의 역점사업들을 연 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한 뒤 내년 초 민선 4기 3년의 평가를 받아보겠다”며 “그 결과를 보고 재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새 정부, 지발법 개정 주요 정책과제로 반영해야”

대신협, 국정기획위 방문

간담회 후 건의자료 전달

전국 주요 지역 일간지 29개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이하 대신협)는 새 정부의 지역신문정책과 관련,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 기금 마련,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을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신협 김중석 회장(강원도민일보 회장)을 비롯, 고영진 부회장(경남일보 회장), 김중석 부회장(무등일보 사장), 경민현 사무총장(강원도민일보 사장) 등은 3일 오전 국민권정부부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 홍창남 사회2분과장, 임오경 사회2분과 문체소분과장(국회의원),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국회의원) 등에게 지역신문 현안 등을 설명하고 정책 건의자료를 전달했다.

대신협은 우선 지역신문발전지원 기금 출연 규모가 갈수록 줄어 250여원을 넘던 기금이 올해는 85억원에 불과하고 재원 확보도 불투명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새 정부의 지역신문정책과 관련,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 기금 마련,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을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2항에 규정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수입금’ 조항을 ‘정부 및 지자체 광고대행수수료 등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수입금’으로 개정을 지역신문지원 별도 계정을 신설토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신협은 또 박수현 의원을 비롯, 민주당 의원 11명이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지원으로 지역신문의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언론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임오경 국회의원(국회 문체위 민주당 간사)은 “한국언론재단

3%를 담은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새정부 1호 여야합의 처리

이사의 총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여야 합치’ 1호 법안으로 되살아났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총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

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 제입법을 추진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룰’과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전남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주기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작목별 연 1억 소득 농가 모델’ 개발 박차

전남농기원, 스마트팜 기반 멜론 등 고소득 모델 구축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형란)은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 연간 순수익 1억 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작목별 1억 농가 모델’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모델 개발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시설채소 및 노지작물의 데이터 기반 영농관리모델 개발’의 일환으로, 현재 방울토마토와 멜론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한 고소득 작목 모델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모델의 핵심은 환경, 생육, 경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목별 최적 재배 조건을 표준화하고, 노동력 투입과 경영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농가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전남농업기술원이 2024년 발표한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방울토마토는 연동형 온실에서 2기작 기준 약 4000㎡ 규모를 운영하면 연 순수익 1억원 이상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한 환경제어를 통해 광량과 온도를 최적화하고, 고품질 선별·포장 기술을 도

입함으로써 상품성을 높이고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작기대 확대와 프리미엄 마켓 전략은 판로 안전성과 수익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멜론 재배 분야에서도 고소득 달성을 위한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약 6,000만 원 수준의 순수익을 1억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수확기별 품종 배치를 통한 연중 생산 분배, 병해충 방제 자동화 시스템 등 고소득 모델 개발을 위한 단계적 소득향상 전략은 효과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이 같은 고소득 모델이 단순한 기술 보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토지 확보와 초기 시설 구축, 경영 안정까지 아우르는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작목별 1억 소득 달성을 위한 적정 재배 면적 기준을 설정하고, 스마트온실, 제어장비, ICT 기반 경영 시스템 등 초기 투자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의 정책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주철현, 참정권보장강화 선거법개정안 발의

이순신 업적·정신 기리는 ‘이순신기념사업법’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사진)은 3일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국가 차원에서 총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이순신기념사업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만 교섭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이나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권행사 보장 대책의 수

립·시행 주체가 각급 선거위로만 한정돼 인력과 예산의 문제 등으로 충분한 효과를 내기가 어렵고,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혜택도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22대 총선에서 강원도의 총 187곳 읍·면·동에 교통 지원차량이 제공된 지역은 25%인 46곳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선거권행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과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할인하는 등의 수립·시행 주체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도의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하도록 했다.

‘이순신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했다.

이순신 장군의 생애, 사상과 업적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교육과 기념사업이 미흡하고, 지역이나 민간 차원의 기념사업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주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뜨거운 투표 열기가 확인됐지만, 현행법상의 규제로 각 지자체가 교통약자 지원에 나서지 못하는 등 선거권행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할 수 없었다”며 “개정안이 이 급히 국회를 통과해, 더 많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